

당국 “감염 가능성 낮지만 배제못해”...민주노총 “선제검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2가에서 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9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기하고 3일 전국 노동자 대회 참가자 전원 선제적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엔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참석자 전원 선제 검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7·3 전국 노동자 대회(7·3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선제적 검사를 받을 것을 지침으로 확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전국 노동자 대회 참가자 선제적 진단검사와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회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의 검사와 결과의 신빙성과

**“증상발생(14~16일) 고려, 가능성 높지 않아”
“최장 잠복기 범위 안엔 있어 가능성 열고 조사”**

시의성에 의문이 있지만 우려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검사를 결정했다”면서 “대회 참가자들은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한다”고 부연했다. 우선 19일 예정된 예정된 제73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연기하고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시기와 방식에 대해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7·3대회가 코로나 19의 감염경로로 특정할 수 없다는 질병관리청과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다시 질병관리청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를 하기로 했다”며 “마치 7·3대회가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의 원인처럼 왜곡·과장 보도하는 일부 언론과 여·야 정치권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보도와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청 “증상 발생일 고려할 때 가능성 높지 않지만...가능성 열어 두고 조사 중”
질병관리청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무처 직원 가운데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같은 부서에서 2명이 17일 추가로 확진됐다. 해당 확진자들은 서울 강서구 직장 관련으로 임시 분류됐으며, 질병청에 따르면 18일 현재 3일 다른 집회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질병청은 17일 3일 전국 노동자 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 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민주노총 측은 17일 저녁 참석자 명단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7·3대회를 앞두고 버스 탑승 시 참가자 전원 명부를 제출토록 하는 등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의 증상 발생일이 집회가 열리고 11일이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장 14일(2주)까지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반대론은 이날 민주노총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며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집회 또는 집회 이외의 공통 폭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를 통한 감염 확률이 낮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선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확진자 3명이 3일 집회에 참석했고 증상 발생일은 14~16일(이라는 점)”이라며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증상 발생일 고려할 때 높지는 않으나 최장 잠복기(14일) 범위 이내에 있어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노조 측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와 추가 확진자 2명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들로 점심 식사를 같이한 것을 확인해 16일 오후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양성 판정에 앞서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대상 통보를 받았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처와 입주 조직 122명 검사 결과 확진된 2명을 제외하면 116명이 음성으로 판명됐고 3명은 18일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 산업재해 사망과 중대재해 근절,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포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서울 종로3가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대회 하루 전인 2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집회 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았으나 양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과는 만나지 못했다. 전날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자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가운데, 수차례 자체를 요청드렸던 지난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의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코로나 19 중앙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 기자

처음 본 아동 3명 강제추행·희롱 공무원, 2심도 벌금형

벌금 1700만 원·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처음 본 아동들에게 성적 언동을 일삼고 강제로 추행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정신

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지역 운동장에서 놓고 있던 아동 3명에게 성적 언동과 함께 강제추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동취재본부

청해부대 301명 전원 귀국...“중등증 입원환자 3명도 포함”

18일 오전 8시 기준 검사 결과 나온 101명 중 68명 확진



현재까지 68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청해부대 부대원 301명 전원이 군 수송기로 국내에 귀국한다. 정부는 입국 직후 전원 유전자 증폭(PCR,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를 해 입원 또는 격리 조치할 계획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

본)에 따르면 국방부는 청해부대 장병들의 귀국을 위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가 이날 오후 4시께 현지로 출발했다. 청해부대 총원 301명 전수 검사가 진행 중으로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101명 가운데 68명이 PCR 검사 결과 확진됐다. 확진자 중 현지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5명이며 중등증 환자는 3명이다. 중등증 환자까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이 가능할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 수송기를 통해 부대원 301명 전원이 국내로 귀국한다. 방역 당국은 입국 후 국내에서 부대원 전원에게 PCR 검사를 하고 확진 여부와 증상 등을 고려해 입원이나 격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부대원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며 모든 부대원들의 귀국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청해 부대원은 주 초 귀국할 예정이며 귀국 후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나 병원 등으로 이송돼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시설을 준비하고 대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선수 학교폭력 허위글 유포한 20대, 검찰 송치

폭로자와 같은 반 친구·교사 진술 상반... 허위 사실로 판단
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이었던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소속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해당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한화이글스 소속 선수 B씨로부터 폭언·폭력·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선수 실명·얼굴 사진 포함)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B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담임교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반이었던 한화이글스 소속 선수 B씨로부터 폭언·폭력·따돌림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선수 실명·얼굴 사진 포함)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B씨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과 담임교사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